

# '김포시 서울 편입' 여당도 민심도 '반쪽'... 갈등 활화산

국민의힘 출신 유정복 인천시장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與 김포 당협위원장 "근거 없는 소리" 맞붙... 黨 분란 소리 김포시민 "서울 편입 역량 부족" vs "재편 흐름 올라타야" 팽팽

김포시의 서울편입 문제가 찬반 논란으로 번져 여당 내에서도 갈리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탄을 날리자 홍철호 전 국회의원(김포을·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반격을 가했다.

6일 홍 전 의원은 본지에 "국민의힘과 김포시민 뜻이 일치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일에 왜 인천시장이 반대하느냐" 의문을 표했다. 이어 "김포 자료는 김포시가 보유하고 있다. '포퓰리즘' '근거 없음' '조사 전무' 등의 의견은 가당찮다"며 "주민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많으면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하는 것이다. 정쟁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서울편입을 공개 반대했다. 1998~2002년 김포시장 역임 후 2004년부터 17·18·19대 김포를 지역구로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라 한층 이목이 쏠린다.

유 시장은 김포 서울편입론을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쇼"로 지칭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견 수렴이 필수"임을 지적하며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가 없었고 수도권방위재정지원 측면에서도 검토되지 않았음을 짚었다.

김포시민의 찬반 역시 엇갈린다. '서울의 일부가 되기엔 역량이 부족하다', '수도권 재편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의견이 맞선 상태다. 2대째 김포 거주자인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 남도·북도 분리를 추진해 왔고 인천 편입도 거론되는데 경기인천 어느 쪽도 들어가기에 애매한 곳이 김포"라며 "서울시 김포구가 김포사람들에겐 가장 유리하다"고 봤다. 이어 "쓰레기 매립지 문제 또한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과도 겹쳐 있으니 잘 고려해야 한다"며 찬성 쪽에 힘을 실었다.

반면 서울에 분가를 두고 직장 때문에 3년째 김포 거주 중인 B씨 생각은 다르다. "지방보조금 다 끊기면 발전이 더 지연될 것이다. 통진읍·고촌읍 등 지역균형선발 대상을 기대하고 간 학부모들도 힘들어진 것"이라며 "이미 다문화 가족이 많아 지역적



5일 오후 김포시 북면5구역 인근에 서울 편입 공문화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아래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남충수 기자

차가 심한데 지역균형마저 없어질 경우 빈민가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B씨는 출퇴근 혼잡 완화 전망에도 회의적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던 이들이 김포구가 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서울로 편입되면 현재 경기도에 편입돼서 유지하기 쉬운 공기업이나 국책연구기관 입주자 더 까다로워져 지역 발전에 난항이 심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여론조사에선 반대 의견이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앤씨치가 CBS노컷뉴스의 의뢰로 1~3일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한 결과, 김포 서울편입에 '반대한다' 응답이 55.5%(매우 반대 37.2%, '반대하는 편' 18.3%)로 집계됐다.

1일 만18세 이상 503명 대상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서울시 접경 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 의견이 58.6%, '찬성한다' 31.5%, '잘 모르겠다' 10.0%로 나왔다. 김포시와 인접한 인천·경기와 서울에선 '반대한다'가 각각 65.8%와 60.6%였다. 이번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장혜원 기자 hjwang@skyedaily.com

## 김두관 "힘지 출마하라" 이재명 압박 당내 최다 6선 박병석 불출마 선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 활동이 부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 현지출마 등 쇄신 촉구 목소리가 나왔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최다선(6선)의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이 대표의 압박감 또한 커질 전망이다.

중도성향이자 계파색 열은 인물로 평가돼 온 박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불출마 결정을 국민과 대전 서구갑 주민·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사당화 논란의 이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6선과 국회 의장을 역임했다"며 "개인보다 당이, 당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해왔다. 국민 삶과 나라 공간을 먼저 따졌다"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돌아봤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폭주 문제를 연상시키는 '연합과반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어느 한 당도 (국회 의석수) 과반을 넘지 않게 만드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며 1당이든 2당이든 다른 한당과 합의할 때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연합과반 구성의 제도화를 역설했다.

아울러 범야권 200석 희망론에 일침을

가했다. 최근 정동영 상임고문, 이탄희 의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발언을 의식한 듯 박 의원은 "강서구청장 선거결과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잘 해서 승리한 것인지 반사이득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빨리 잊어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이 5일 자기 SNS를 통해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의원을 힘지로 보내는 '내살 깎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 메가서울 반대 입장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에 신랄한 비판도 가했다. 김 의원은 "메가서울 등이 가짜된 진짜된 국민의힘을 가속하면서 국민관심 모으기에 성공 중"이라며 "민주당은 공권탈락·사법리스크가 두려워 혁신에도 이슈에도 침묵해 국민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위기가 몰려오는데 200석 압승론을 떠드는 정신 나간 인사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6일 당 총선기획단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정을 심판하며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만들 책무가 우리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요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오주환 기자 jhoh@skyedaily.com



2월6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尹대통령, 이번 주 내 대법원장 후보 지명

이광만·김형두 등 4파전 이균용 낙마... 한 달째 공석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유력 후보군으로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꼽힌다.

부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달 16일 추천한 5명 중 한 명이다. 보수성향 판결을 주로 해왔다고 평가된다. 전북 정읍 출신 김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행정처 차장을 거쳐 현재 재판관이 됐다.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

금 수수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경북 경주 출신 조 전 대법관 역시 변협 추천인사로서 보수색채가 짙다고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일찌감치 검토해 온 인물이다. 대법원장 임명 시 2027년 6월 정년(70세)을 맞아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강원 강릉 출신인 정 교수는 고려대 법대와 사법고시를 거쳐 약 1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사법부를 떠난 지 약 20년이다. 그가 대법원장에 오를 경우 30년 만의 첫 비(非)서울대 출신, 첫 교수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야당의 정치 쉐범 속에 낙마한 이래 대법원장 자리가 약 한 달째 공석 상태다.

오주환 기자 jhoh@skyedaily.com

### 만평 화필살인(畫筆殺人)



화필살인(畫筆殺人)은 조그만 쇠필이로 사람을 죽인다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을 응용해 그림과 글 몇자로 독자를 감동시킨다는 의미다.

**근로복지공단**

보상, 요양, 재활까지! 일하는 사람 모두!

# 산재보상 올라잇!

김남국

신속! 공정!

## 01 산재보상

- 출퇴근재해보상
- 업무상질병보상
- 보령급여지급

빠른 쾌유를 돕는!

## 02 요양서비스

- 요양지원(치료)
- 재요양· 추가상병
- 공단병원 운영

안정적인 일터복귀!

## 03 재활서비스

- 의료재활
- 심리재활
- 직업재활